국정신문

1996년 1월1일 (월요일)

週刊 / 비매품

國政指標 /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 튼튼한經濟 / 건강한社會 / 통일된祖國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劉世俊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 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391-1027, 395-1031 · FAX 391-1034

金泳三대통령 新年辭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꿈을 나누며

친애하는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199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북한동포 여러분에게 올해가 희망과 기쁨이 소생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깊은 새출발의 날을 맞아, 저는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꿈과 믿음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자는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우리 민족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새로운 문명의 창조에 앞장서는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업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 반세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룩해놓은 소중한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문민정부를 탄생시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개혁'으로 지난 시대의 온갖 병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의와 법, 양심과 윤리가 지배하는 참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이 '역사 바로세우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며 '제2의 건국'을 향한 자랑스런 출발입니다.

내외 동포 여러분!

국민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사회에는 사랑과 화합이, 나라에는 번영과 긍지가, 그리고 민족에게는 통합과 자존이 넘치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일류국가, '신한국'의 꿈입니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으로 이처럼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사회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정직한 정부,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소명앞에 지역과 정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됩시다.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굳게 단합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1996년 병자년이 '제2의 건국'을 향한 창조의 대업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

국정신문 축쇄판 발간

정부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정확하고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앞장서온 『국정신문』이 축쇄판 제1권(1992.2~1993.12), 제2권(1994.1~1995.12)을 발간했습니다.

4 · 5面 기획특집

'96 民生-이렇게 달라진다

時論 역사 바로잡기와 정신혁명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만들 수 있다

許 勝 一 서울大교수 · 역사학

천년 이상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흥망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로마 시민의 윤리, 도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시민들이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갔을 때 로마는 부강했던 반면, 그렇지 못했을 때는 혼란과 무질서 하에서 멸망의 길을 재촉했다.

도덕 · 윤리성이 국가 흥망 좌우

금욕주의를 표방한 스토아의 윤리사상이 로마 지도자들의 정신세계를 좌우하고 있던 로마공화정 중기 시대와 소위 '로마의 평화'인 5현제시대는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때이고, 쾌락주의의 에피쿠루스 사상이 유행하던 로마 공화정 후기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었고, 제국말기에는 결국 야민인들에게 멸망당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정신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어 온갖 종류의 사기, 살부모와 극악한 살인이 자행되고, 심지어 학교의 폭력 서클의 조직화 등이 매일의 뉴스란을 덮고 있다. 그뿐인가? 군사문화 속에서 특혜와 비리에 젖어 돈맛에 길들여졌던 다수의 무리들은 여전히 온나라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어 과거의 정치 관행이나 지역 정서에 매달려 개혁에 반기를 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도 개혁정치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범죄가 들어나면 누구는 나보다 더한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느니 강변하면서 구태의연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정의와 법, 건전한 윤리도덕에 입각한 이상적인 국가이다. 기원전 3세기 로마가 그러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기도 하였고, 일반 국민은 신의 속에서 살다 보니 사기죄와 수뢰죄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이 한니발전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 백령도에서는 최초로 외지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문민정부 개혁 큰 성공 거둬

이것은 우리 전국민도 순박한 백령도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범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일련의 개혁정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경제개혁, 돈 안드는 지자제 확립의 선거개혁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 5 · 18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치개혁 등이 그렇다. 5 · 6공의 엄청난 부정, 부패, 비리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곧 역사 바로잡기운동으로 들어갔다.

〈2面에 계속〉

제52회 國務會議메모 〈12월 27일〉

법률안 28건 공포

이번 국무회의는 개각후 **李壽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였으므로 우선 신·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이송되어온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28건의 법률안 공포를 했다.

鄭根謨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날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률에 대해 주무부처는 WTO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구하여 시행령 제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이어서 종합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3년간 유예하는 규정을 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포함한 조세관련 대통령령안 17건도 이미 부처간 합의가 완료된 안건들이라 일괄 상정, 의결되었다.

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은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취임후 우체국을 순시해보니 우체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륜오토바이 구입도 동 규정에 의거 총무처와 협의하여 구입하면 1년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오토바이 정도는 사무용품처럼 가볍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金杞載** 총무처장관은 "법령에 관계없이 운영의 묘가 있도록 하겠다"했고, **李錫采** 장관은 "운영의 묘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다.

국정운영종합평가 보고

金杞載 총무처장관은 1995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95년도 국정운영종합평가를 각각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李壽成 총리는 총무처의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제도의 개선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일부기업과 국민들은 규제완화 등 행정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용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끔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행정조정실의 보고에 대해서는 "세계화라는 것은 외국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일류가 되겠다는 뜻인데 아직도 우리의 세계화 노력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는 새해 업무계획에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軍의 사기진작 위한 노력 당부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으며, 이에 **李壽成** 총리는 "국민들이 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군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군은 또 어떠한 도발도 퇴치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李壽成**총리는 "연말연시이고 또 비자금 정국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한 만큼 국민들이 편안히 느낄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은 연말물가, 내무부는 민생치안, 건설교통부는 연말연시 수송교통대책, 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 복지부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잘 세워 시행하고, 특히 연휴기간 중 공공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허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리 : 高富安 공보처 공보관

對北 쌀지원 北韓 태도변화에 달려

12월 18일자 동아

對北 쌀제공을 위한 대북 비밀접촉을 주도했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장이 최근 또다시 북한측과 북경에서 접촉, 쌀 추가지원 등을 논의중이다.

통 일 원

정부는 對北 쌀추가지원을 위한 어떠한 비밀접촉을 시도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히 우성호 선원 송환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 변화로 정부는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적십자를 창구로 한 방식을 일관해서 유지해나갈 것이다.

또한 1월24~25일에 열릴 예정인 韓·美·日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북 추가 쌀지원여부'를 포함한 논의내용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 성급한 예상보도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공보관실)

北韓에 제공한 쌀 장기비축용으론 부적합

12월 13일자 각지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지원한 쌀이 일반국민에 전해지지 않고 군량미 등으로 비축된 사실이 밝혀졌다.

통 일 원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쌀은 지난 여름철 백미상태로 완전도정을 한 쌀로 북한이 군량미로 장기 비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류3과)

역사 바로잡기와 정신혁명

〈1面서 계속〉

또한 지금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자원과 인구가 열세인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까닭에, 우리 온국민의 결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나쁜 유산 청산 긴요

세계화를 완성하고 일련의 개혁을 성공리에 완성하려면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우리 국민의 일대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생각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의식으로의 대전환이 이 시대의 요청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 명예는 지식 또는 지혜, 정의와 선행, 용기, 인내의 기본적 덕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각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를 망치는 부정, 부패, 비리 그리고 쾌락 속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각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으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또 현재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일세대 이상에 걸친 군사정권의 나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여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 범죄자들이 설 땅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바로잡기의 진정한 의의로서 정신혁명을 완성시키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무크誌 포럼 개혁

시론/김일수
역사 바로 세우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

21세기를 준비한다
정치개혁, 기회는 오히려 딜레마에 있었다 김병국
한국의 안보리 진출, 우리 외교의 세계화 · 다변화 · 다원화 백진현
한국의 정치개혁,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함재봉
경제정의 실현 속에 성장 잠재력 추구 나성린
정당한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김형철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먼저 울타리를 치자 김상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한국 정경유착 개혁관
한국의 대기업, 그 내면은 중국형

기획좌담/유종성 · 이승희 · 황석하 · 이대훈 · 유석춘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해야 하나

국민 여론조사
부패, 이렇게 생각한다

외신기자가 본 한국/히라이 히사시
한국사회, 이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삼 정부의 전반기 제도개혁
금융실명제의 위력, 지하경제를 죽인다 강만수
통합선거법 혁명, 돈은 묶고 입은 풀었다 김호열

21세기 뉴미디어 전망
한국, 21세기 정보통신산업 강국부상 유영준
삶의 질과 뉴미디어의 세계 이중한

포토에세이 김희중

▶시 김명인/박라연 ▶수필 송정숙/하일성/이정자/경암/조동원 ▶만평 조주청/주완수/임재학 ▶독자 제언 차형수 外

편집위원
송복 연세대 교수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달영 한국일보 심의실장
오택섭 고려대 교수
안상수 홍익대 교수
송호근 서울대 교수
정진영 세종연구소 교수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 대표전화 (02) 391-1027

'95 國政평가 및 '96 推進과제

脫규제정책으로 所得 1만불 달성

95년 한해 우리나라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닦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 3년째가 되는 해이자 광복 50주년을 맞은 해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선진국 대열에 서서 맞기 위해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이 경주된 한해였다는 평가다.

민생개혁 지속추진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보더라도 7월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전격 실시되고 금융실명제로 노출된 전직 대통령의 부정비리사건 수사 등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끊는 혁명적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돈이 적게드는 선거의 기틀이 마련됐고 교육·사법·행정개혁 등에 이어 민생개혁과제들이 추진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경제면에서도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는 4.5%안팎으로 안정됐다. 새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경제규제의 단계적 철폐로 산업환경이 개선된 데 힘입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민 1인당 GNP 1만달러시대가 열렸다. UN안보리에의 진출과 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행정규제와 간섭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도 도출됐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균형된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요청됐다.

경제적 '내실과 균형'

이같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있은 정부각 부처의 '95년도 국정운영 종합평가보고' 결과 밝혀졌다. 총괄부문을 맡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지난 한해의 정부의 활동을 결산하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의 공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깨끗한 정부, 공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동참하며 △경제발전은 총량적 성장에 못지 않게 '내실과 균형'을 꾀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래지향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등 4개 부문의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통일·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개선=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통일관련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현실성있는 '북한觀' '통일觀'을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 對국민 통일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세계화 외교의 추진=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남북대화 실현노력 등에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해간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6년중에 APEC무역투자자유화계획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OECD가입 실현을 추진하는 한편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해외동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서두른다. 해외에서의 한국학 진흥 등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면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경제분야 ▲중소기업지원대책='중소기업지원 9대시책',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공장입지애로해소대책' 등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노동집약적 업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전환지원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경영여건 변화에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진단, 지도기능을 강화해나간다.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현장중심으로 시공은 물론 사전조사, 설계, 감리, 사후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분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단기적으로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행정 및 재정구조개혁 등 근원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공직의 세계화역량 확충=공무원의 능력과 직급의 연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 실시한다. 실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승진적체 완화대책 등을 강구 시행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방안체제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안전관리종합대책=건설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문화분야 ▲국민 보건복지 수준의 향상='국민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세운다. 자원봉사활동, 공동모금 등 민간복지분야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각종 보건시책을 국민생활개혁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펼쳐나간다. 저소득보호계층의 생활보호 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98년까지 1백%로 보장한다. ■

中國 은행 '실명제' 연수단 訪韓

"한국민들의 솔선참여 인상깊다"

崔 揚
중국 인민은행 은행사 부사장

'개혁 중의 개혁'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부문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주고 종래에는 국민의 생각과 행동까지를 올곧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특히 역사 바로잡기로 이어진 개혁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위력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창구서 실무 실습

이러한 때 금융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中國의 은행 대표단이 우리의 금융실명제 실시현황과 실무 등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찾아왔다(구랍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실무자 9명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연수단은 우리 재정경제원, 은행·증권감독원, 국민·제일은행 등을 차례로 방문할 때마다 한발 앞선 한국식 금융실명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실명제 현장실습을 가진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창구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민들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 실명확인절차를 밟는 것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단의 추이양(崔揚, 인민은행 은행사 부사장)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경험 중국에 큰 도움

— 중국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조세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 등 부의 축적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의 징수는 그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실상 파악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개인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가능케 함과 더불어 조세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와있나.

"중국은 최근 금융실명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곧바로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관련자료를 수집해왔다. 그 가운데 한국의 재정경제원이 펴낸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백서』는 많은 도움을 준 책으로 꼽을 수 있다."

— 실명제 견학을 위해 유독 한국을 택한 이유는.

"물론 실명제는 그것이 갖는 투명성과 그 바탕에 깔린 합리적 사고 등으로 일찍이 서구에서 정착된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양권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과 정서적인 면 등 많은 점에서 비슷하리란 생각을 하고 있다. 제도실시에 따른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같은 동양권 국가로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중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중국 국민들의 실명제 인식 정도는 어떤가.

"중국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국민들의 실명제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또 정책입안자들이 그 기능 방법 등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충분한 홍보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개인 소득 은행으로 몰려

— 앞서 부의 축적을 말했는데 중국에서 개인소유는 인정되는가. 축적된 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경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개체경제(개인소유)도 일정 부분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개인소유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사회주의 공유제 전제하에 여러가지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개인소유가 늘어도 투자할 곳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저축으로 몰리는 형편이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 중국의 주된 정부재정수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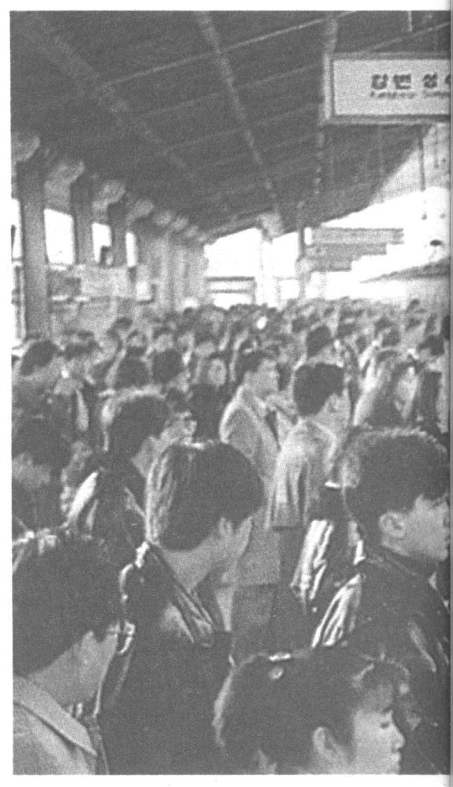
"나라 소유의 공유제 기업주체가 대부분이다. 전체 재정수입의 60%정도에 해당한다. 앞서 밝힌대로 개인의 재산축적이 늘면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인의 세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徐光植기자

'96 民生 - 이렇게 달라진다

節稅·금융·복지혜택 등 '삶의 質'

새해부터는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종전보다 적어지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또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불이익을 당했던 대출이자 연체제도도 최고제도입으로 시정된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생계보조비도 7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늘렸으며 어민후계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제도화했다. 변경되는 稅制나 새로 생긴 제도는 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삶의 질을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稅制 및 금융·증권·보험부문의 가계지출을 줄이는 한편 보건복지부문에서는 국민건강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을 크게 늘려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책임의 폭과 한계도 보완, 제도화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실시해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쓰레기종량제에 진일보한 폐기물관리체계를 손질,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분류를 엄격하게 했다. 이는 생활환경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생활과 직접연관이 있는 새 제도 및 변경된 제도만을 간추렸다.



새해부터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을 주는 소득세 경감과 각종 금융제도가 '생활

세제부문

▲소득세율 인하=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낮아지고 세율구조도 5~45%의 6단계에서 10~40%의 4단계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금액이 3백1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공제한도는 6백9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72만원)와 배우자공제(54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 등이 각각 1인당 1백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의 경우 2인 이내의 제한이 폐지된다.

中企 지방이전 때 稅 면제

교육비 공제의 대상도 초·중·고교생 자녀에서 유치원생(1인당 70만원) 및 대학생(1인당 2백30만원)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96년 소득분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0~40% 세율의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4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5%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단 주식의 양도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 5년만기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되며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의 정기 예·적·부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30%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가입하면 1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1가구당 1통장, 불입한도는 잔액기준 1천2백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중소기업 세지원=법인세율이 2% 인하되고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이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에서 15%로 확대되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오는 98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영세상인 세부담 경감=부가가치세 면세점이 연매출액의 1천2백만원 미만에서 2천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금액은 연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새로 도입돼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가 신설돼 매입세액의 10~30%를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농어민 세지원=부업 축산농가가 사서 쓰는 배합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사료구입 비용이 다소 줄어들게 되며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또 축산, 양어 등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소득금액 8백만원 한도에서 1천2백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양도세율 3단계 인하

▲기타 세부담 경감=양도소득세율이 40~60%의 5단계에서 30~50%의 3단계로 인하되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보유로 완화된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자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 및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는 최고 50%, 증여세는 최고 55%에서 각각 최고 40%로 낮아지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공제는 다소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저축의 축소=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장학적금, 국민주신탁,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등 7개 저축상품의 경우 95년 불입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 소액가계저축과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저축 등 5개 상품은 올해말 불입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율로 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세율이 10%로 늘어난다.

금융·증권·보험부문

▲은행의 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 자격제도 기간 설정=금융기관 임원중 문책받은 임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장 자격제한기간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권고일로부터 7년, 업무집행정지는 정지일로부터 5년, 문책경고는 문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은행 경영평가 제도개편=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지도비율이 경영평가 지표로 새로 도입되고 현행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법을 일부 도입한다.

할부금융회사 개설

▲외국은행 지점설치 절차 간소화=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려면 먼저 사무소를 개설한 뒤 1년이 경과해야 하는 사무소 前置主義가 폐지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직접 지점설치가 가능해졌다.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취득 완화=10대 그룹은 폐기물처리 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의무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주거래은행에 대해 사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이자 연체催告制=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사전에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연체최고제가 시행된다. 일정한 유예기간(개인 1개월, 기업 10~4일)내에 자신의 연체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고객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불량거래자 해제요건 완화=내년 1월부터 5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연체대금을 갚는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돼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저축·보통예금 타인 양도 허용=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던 타인 양도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까지 확대된다.

▲투자금융사의 종합금융업 허용=내년 7월1일부터 서울의 8개사 등 전국 15개 투금사들이 종합금융 업무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상향=지금까지는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1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75%를 넘을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할부금융제도 도입=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값비싼 내구재와 주택, 기계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필요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할부금융사가 문을 연다.

▲증권투자신탁제도 개선=투신과 증권간의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투신사는 투신운용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신탁회사와 운용업무만을 맡는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된다.

▲외국인투자제한 완화=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소매업종의 경우 종전의 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원·엔貨 선물환 거래 가능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개방=부분개방 또는 미개방돼 있는 1백95개 업종중 88개 업종이 신규개방 또는 개방확대된다.

▲선물거래제도 도입=7월1일부터 금융 및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이 5월3일 개설된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개선, 주식은 시가로 채권은 취득원가로 각각 변경하되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은 취득원가를 반영한다.

높여

원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사는 이 제시된 요율을 기초로 각사 형편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고요율제가 시행된다.

▲장기저축성상품 보험료 납입한도 제한=1월부터 보험가입자 한사람이 5년간 내는 보험료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 등 저축성이 강한 일시납상품은 1인당 1억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된다.

稅制를 비롯한 금융·환경·복지제도가 상당부분 바뀌거나 새로 생겼다.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거래 결제방법 변경=원화와 외화간 거래에 따른 현물환 결제방법이 익일결제에서 제2영업일결제 방식으로 바뀐다. (2월1일부터 시행)

▲원/엔 시장 개설=현재는 외국환은행간 원/달러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 원/엔 시장이 개설돼 현물환 및 선물환이 거래된다.

자동차보험 보상한도 확대

▲예금보험제도 도입=6월부터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설된다.

▲직불카드 시행=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2월1일부터 선을 보인다.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도입=4월부터 하나의 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별로 각각 1천5백만원, 6백만원,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8월1일부터 시행)

▲제3단계 자동차보험료 자유화=4월부터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가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된다.

▲해상·특종보험 권고요율제=4월부터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 통계를 이용해 평균 보험요율과 적용범위폭을 산출해 재경원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사는 이 제시된 요율을 기초로 각사 형편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고요율제가 시행된다.

▲국공채 창구판매=3월께부터 보험사 영업점에서도 국공채를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문

▲저소득층 생계보호=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높인다.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7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시설보호자는 7만2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각각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문계 고교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학비를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까지 확대 지급된다. 생업자금융자 한도액도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상가구도 6천가구에서 7천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노인복지=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연중 실시되며 버스승차권 대신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인 생계비 인상

▲장애인복지=장애인에 대한 의보적용이 연중 실시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술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가 제한을 받게 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 지정이 의무화된다.

▲의료보험급여확대=의료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적용기간이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되고 컴퓨터단층촬영(CT)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영유아보육시설 확충=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문

▲저황유사용지역 확대=도시지역 및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저황(1.0%)B-C유 공급·사용지역을 2개 광역시, 10개 시, 2개 군으로 확대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환경기준 초과 또는 초과우려지역 등 개선이 긴급한 지역을 환경부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가 배출량조사와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 강화=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유해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작차 및 운영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91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예고되어 온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96년부터 강화되고 질소, 인 등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폐기물처리 실태조사

▲배출시설 신고제 전환=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특별대책지역 등을 제외한 배출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수도법 개정(95.7.1)으로 96년중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등 31개 시·군·구에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 지원비로 58억여원을 투자한다.

▲폐기물센서스 실시=폐기물관련 정책목표설정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부터 전국의 폐기물발생량을 지역별, 발생원별, 성상별 및 업종별 등으로 표본조사하여 처리실태와 처리시설의 수요를 조사한다.

▲폐기물관리체계 개선=현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폐기물분류체계를 변경하여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배출시설 설치 공장, 지정폐기물배출 공장, 폐기물 1일 3백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일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한다.

내무부문

▲주민등록 온라인 열람 및 등·초본 발급대상 확대=본인 또는 세대원, 직계 존비속 등에게만 제한돼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상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까지 전면 확대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던 것을 팩스접수도 가능토록 한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취득세, 등록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개인간 거래시 신고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전환한다.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등 세제지원=800cc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하고 면허세도 50% 정도 인하한다.

▲1가구2차량 중과 제외 대상 확대=영농을 하며 농지 소득이 있는 기혼자와 근로·사업·농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賣買用 中古車稅 경감

▲3천cc 이상 대형 승용자동차세 세율 인하=비영업용 3천cc이하는 cc당 4백10원에서 cc당 3백10원으로, 비영업용 3천cc 초과는 cc당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인하한다.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차에 대해 자동차세 50%를 경감한다.

▲천재 등으로 인한 자동차 취득시 비과세=천재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장애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세 등 면제범위확대=일반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언어청각 장애인 2~3급, 정신지체장애인 1~3급을 포함. 국가유공상이자 1~5급 전체에 대해 취득, 등록, 면허, 자동차세 면제. 6급은 자동차세만 면제.

▲지프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조정=배기량 2천cc이하에 대해 영업용은 cc당 10원, 비영업용은 cc당 1백60원으로 조정하는 등 9~21%까지 차등 인상한다.

▲화물선박에 대한 세제지원=외항 화물선뿐만 아니라 연안항로 운송용 화물선박도 취득세,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漁民후계자 稅制 지원

▲주민세 소득할 세율조정=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액(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어민 후계자 세제지원=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어민 후계자 및 수산계열 학교 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경감한다.

▲물류시설 및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 창업보호 육성센터, 유통단지, 중소기업 임대공장, 컨테이너 부두공단 지원 시설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종토세 50%를 경감한다.

▲농어촌주택조합 지원=수도권 및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도시 무주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조합결성시 동당 1천6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

'올해의 공무원' 수상자 아내의 글

정부는 지난 26일 올 한해 가장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선정, 이들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의 공무원에는 공보처 金順吉 국립영상제작소장, 재정경제원 鄭智澤 물가정책과장, 정무장관(제2)실 安熙鈺 제2조정관 등 58명이 선정됐으며 이 중 23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나머지 35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뽑힌 34개 기관은 외무부 駐유엔대표부, 수원교도소, 서울 서초소방서, 인천지방노동청 등이다. 이번에 선발된 올해의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및 인사상의 특혜가 주어진다. '올해의 공무원'으로 엄선된 5명 중 4명의 부인들로부터 이번 수상소감을 두 차례로 나누어 들어본다.

金泳三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올해의 공무원과 최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柳 益 珍
金順吉 공보처 국립영상제작소장 부인

TV뉴스에 등장한 家長의 얼굴

다 큰 아이들이 TV화면에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가 하면 여든을 넘기신 어머님이 "어디, 어디?"하시며 금새 지나가고 만 뉴스장면을 좇으시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나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한 모양이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어보았다.

남편의 훈장.

나는 그 품격이 어떠하며 남자분들, 특히 공직 세계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모두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없는 25년 공직생활을 해온 끝에 맛본 소중한 열매라는 사실만은 증언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 가정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고생도 무던히 했다. 열손가락을 꼽을 만큼 잦은 이사에 고개를 내저을 무렵 화곡동 언덕배기의 조그만 단독주택을 마련하고는 "우리 다시는 이사 가지 맙시다"하며 주저앉은 것이 10년 세월을 헤아린다. 그러는 동안 아들 셋이 학교를 마치고 더러는 취직을 하고 군대에도 다녀왔으니, 두루 감사해야 할 일이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어도 군색하지는 않게 아이들을 키워내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며 살아온 것도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기관으로 옮겨간 이후 2년 동안 남편이 새로운 사업 즉 '정부' 방송을 시작하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일을 지휘 감독하느라고 노심초사하며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면서까지 애태우던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제 바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공직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공보처 모든 분들 특히 영상제작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金 恩 洙
李承培 국립공업기술원 화학부장 부인

훗날 손자며느리한테 자랑하고파

굳이 한 것이 있다면 그이가 명예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마음 편하게 대해주고 아내로서의 氣를 모아준 것뿐이다.

공직자가 명예를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흔히들 말한다.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그러나 공직자에게는 "명예를 잃으면 전부이상을 잃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다.

그러기에 그이가 이번에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받게 되는 훈장은 더없이 소중하고 값져 보인다. 장농 속에 깊숙이 간직하였다가 먼훗날 손자 며느리에게 자랑삼아 보여주고 싶다.

또 한가지 그이에게 보탬이 된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로서 한 평범한 내조이다.

이제 막둥이의 수능시험도 끝났다.

믿음직한 장남, 일찌감치 엄마의 대학 후배가 된 딸, 어쩌면 아버지의 동창이 될 것 같은 귀여운 막내, 참 대견스럽다.

이래서 차가운 이번 겨울도 우리 집안에서는 훈훈한 겨울이 되고 있다. ■

창공을 나는 새들과 같은 학창시절의 자유로움을 뒤로 하고 공무원의 아내로 어언 25년.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뒤를 되돌아보니 80만 공무원의 아내가 그러하듯이 짠돌이 엄마라는 애칭을 가지고 의연하게 한 가정을 꾸려간다고 노력하였지만 어디 내놓을 만큼의 특별한 내조랄 것도 없다.

한마디

경찰행정實名制로 민원 줄인다

임 남 희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사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경찰상 세우기의 하나로 업무 실명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민원인의 고소, 고발, 교통사고 이의신청 등을 했을 때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담당한 직원이 자신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경찰행정을 펴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및 파출소 근무자의 경우 접수증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게 해 현장출동 때 민원인에게 소속과 성명, 처리기간 등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경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국민과 가까워지는 경찰이 되고자 함이 그 기본취지이다.

민원실명제를 받아들이는 도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도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는 홍보에 나서자 문의전화가 오기도 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민원을 신청하는 법을 몰라 불편했던 도민들에게 어려울 때 좀더 좋은 방향으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를 지키는 경찰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특히 민원대상으로 많이 꼽히는 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경우 실명제 도입에 따라 신속하고 의문제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이 제도정착에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찰행정으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잡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새해 아침에 다짐해본다. ■

1월의 독립운동가

友江 宋 鍾 翊 선생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광복회는 1월의 독립운동가로 올해로 서거 40년을 맞는 友江 宋鍾翊선생을 공동으로 선정했다.

1887년 경북 대구에서 출생한 선생은 1906년 미국에 유학간 후 재미 독립운동단체인 公立協會에 가입해 40여년을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1908년에는 장인환, 전명운 의사가 친일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하자 두 의사의 석방을 위한 재판후원회의 재무로서 재판경비 조달에 힘썼다.

1912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의 리버사이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맨 먼저 송종익 선생에게 '흥사단 약법'의 초안을 보이고 상의했고, 이때부터 흥사단의 첫 동지가 되어 일생을 바치게 된다. 특히 1921년부터 흥사단 이사부의 재무원을 역임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재시 실질적으로 흥사단을 이끌어간 주역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흥사단 미주 본부의 사무는 송종익 선생의 주재하에 이루어졌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족까지도 보살피는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다. 중국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지원을 위해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세워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컸고, 주식회사를 통해 적립된 자본으로 중국에 은행을 세워 독립운동 자금을 항시 확보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선생은 그후 대한인국민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 미주지역의 주요 단체에서도 활동하면서 흥사단의 정신적 실천을 몸소 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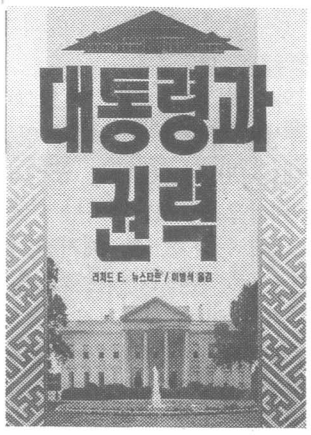
한편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꾀하고 항일 승리를 위한 단체들을 규합,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했다. 독립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에 보내어 광복사업비에 보충케했다. 선생은 광복후인 1945년 11월 귀국하여 조국재건과 흥사단 부흥에 힘쓰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지원과 흥사단 정신을 보급하다가 1956년 1월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내가읽은책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

국민과 '쌍방향 교신'이 중요하다

高 永 奎 청와대 정무비서실 정책조사 과장



요즘처럼 권력에 대한 무상함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세인의 비난 속에 '보통사람'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명예추락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신이 여지없이 추락한 대사건이었다.

독재권력은 일방향 권력행사

대통령이란 어떠한 직책인가? 대통령의 권력은 어떠한가? 얼마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노태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로 시작되는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서술을 정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실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알 수 있다. 언론이 침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퇴임후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권력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원래 권력이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에 그 가변성과 다차원성이 더 한층 강렬히 느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는 독재정권 아래서 권력은 언제나 존재하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배의 사슬이 점차 느슨해지면서 개혁과 개방의 거친 바람이 사회 전역에 일기 시작하는 정치적 해빙기에는 권력이 더 이상 '뻔한 것' '당연한 것'일 수가 없다. 특히나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제한당하지 않아 모든 것이 공개되고마는 민주사회에서의 권력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정치학자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의 관심이 되는 것이다.

하버드대학의 뉴스타트 교수가 쓰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 이병석 박사가 번역한 『대통령과 권력』은 여러 차원에서 권력에 대한 담론의 영역을 넓힌 대통령학 지침서로 보인다.

독재권력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없는 '일방향'의 권력행사가 가능하고 실재 그런 예가 많았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시대'에는 정부의 모든 주요한 정책 결정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뉴스타트 교수는 이 책에서 현대 정치학이 체계적 이론화의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린 무형의 정치적 의지와 감각 및 감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권력은 언제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부단한 정책실험을 통해 형성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탁월한 상황 감각 가져야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가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자신이 내리는 선택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권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장악하는 경우에 대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권의 관리는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권력과 위상을 강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탁월한 상황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읽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설계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정책에 담긴 시대정신을 체현하는 주체세력이 대통령을 받쳐주어야만 한다. 즉 정책과 시기선택 그리고 추진 주체세력의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혼자서 모든 문제 해결 못해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한 대통령보다 실패한 대통령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뉴스타트 교수는 지적한다. 정책과 시기선택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선택은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뉴스타트 교수는 미국 백악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한때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석가이다. 이 책의 곳곳에는 상세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서 마치 대통령학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한편 이 책의 역자인 이병석 비서관은 역자 서문에서 이제 대통령 한사람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시대는 멀리 지나갔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국사회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각계각층의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들 사이의 합의와 협력을 먼저 도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철학, 도덕성과 결단, 개혁의 신념으로 그들의 끌어안으면서 국가 발전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목표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국민의 잠재력을 집약시켜 나가는 그러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 과업은 어느날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문민정부 출범이래 끊임없이 추진되어온 개혁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 과업은 과거 정통성이 부족한 대통령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권력행사에 대한 청산작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 청산작업이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동참으로 여하히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역사 바로세우기' 과업은 앞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분석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책 『대통령과 권력』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 책을 지금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과 현재의 지도자들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대통령과 권력』
리처드 E. 뉴스타트 著 · 이병석 譯
효영출판 刊 · 95년版

영어한마디 ⑮

새해를 맞으면 소망도 품어보고 결심도 한다. 소망하는 것은 make a wish 이고 결심하는 것은 make a resolution 인데 ***새해의 다짐***은 ***new year's resolution***이라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Happy new year이다.

Peter : Happy new year, Willy.

피터 : 새해 복 많이 받게나.
새해에 무슨 다짐을 했나?

Make ***new year's resolution?***

Willy : Yeah.
To be completely fluent in English.
What's yours?

윌리 :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거야.
자네는 뭘로 했나?

new year's resolution
새해 다짐

스티븐 강 홍익大 강사

이사람 사무혁신대회 최우수상 수상

표준형 人事관리 시스템 개발

秋 炅 均
정부전자계산소 업무분석과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아 기쁩니다."

民官 공동주관 '사무혁신대회'에서 정부부문 최우수상을 탄 秋炅均사무관(정부전자계산소 업무분석과)의 겸손한 소감이다. 그는 81년 7급공채로 공직을 시작, 전산프로그램 개발에만 온 힘을 쏟아온 전산통.

최우수상을 받은 사무혁신 내용은 각 급기관이 행정전산망용 PC를 통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부표준형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 것이다.

종래의 공무원 人事관리가 인사담당 실무자의 수작업이나 기억력 또는 경험에 의해 정리되고 관리돼왔던 것에 반해 이 시스템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비롯해 약력사항, 정·현원 통계관리 등 10개분야를 사진 처리하는 등 최신기법을 도입해 전산화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모든 인사변동사항이 일괄 자동 정리되어 인사담당자의 시간절약은 물론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秋사무관은 "이 시스템이 현재 4천7백여기관에 보급, 3분의 1가량의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에는 전 기관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총무처는 이 시스템을 도입, 96년 4월말이면 5급이상 공무원 인사관리의 자동전산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또한 90만 전 공무원의 인사관리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무원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처리기술지도사' 등 전산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秋사무관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94년부터 꼬박 1년여가 걸렸다.

그의 노력의 결과는 인력절감면에서 연간 2만3천5백명에 약 11억7천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秋사무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무혁신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등 행정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와 관련, 개선의지를 갖는다면 행정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학교 교사인 朴美善씨(37세)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었다. **洪永模기자**

종합청사게시판

'중앙 119구조대' 본격 운영

내 무 부

대형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구급활동을 벌일 '중앙 119 구조대'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발대식을 가진 이 구조대는 61명의 구조대원과 헬리콥터 조종사 등 총 71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됐으며 구조공작차·탐지기·유압절단기 등 최신 구조장비 2백80여종을 상비하고 있다.

부정방지 홍보달력 제작 배포

감 사 원

감사원 자문기구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부정방지 홍보 달력 1만부를 만들어 전국 관공서 민원실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이 달력은 지난해 11월 달력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에서 대학생 등이 출품한 작품 63점중 수상작 6점을 뽑아 제작한 것.

정부제1·2종합청사 금연지대로

총 무 처

96년 1월1일부터 광화문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을 금연지대로 설정한다. 이는 연면적 3천㎡가 넘는 공공건물과 일반건물에는 반드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 국민보건증진법에 따라 종합청사 내에도 이와 같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사 곳곳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는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농어촌·벽지학교에 국악기 지원

문화체육부

국립국악원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농어촌·벽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 국악교육에 필요한 악기와 교재를 지원한다. 국악교육 활동이 미약한 농어촌 등의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는 이 사업은 학교별로 장구·꽹과리 등 농악기 10점과 자료가 지원된다.

開廳 30주년 행사 준비 다채

국 세 청

국세청은 96년 3월3일 개청 30주년을 맞아 영상홍보물 '국세청 30年史' 제작을 96년 2월께 완료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해 민원인들에게 국세청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난 30년간의 국세업무 변화를 화보로 실은 책자 발간과 함께 전국규모의 세정관련 글짓기대회, 세무공무원 창안상 등의 행사도 계획.

공공채널 K-TV(14) 새 편성

명사초대석·지구촌 이모저모 등 6개 프로 신설

공공채널 K-TV는 96년 1월1일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고 다양하게 편성, 시청자를 찾아간다.

방송시간을 변경, 시청률이 높은 오후 및 심야 시간대방송을 대폭 늘이는 한편 지식인층 및 40대이상 보수안정계층을 주시청자로, 고정시청자의 확보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간 총방송시간을 종전의 57시간에서 10시간 늘여 67시간으로 평일은 14:00~23:00까지 9시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10:00~23:00까지 13시간 방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편성, 특성을 살렸다. 공중파가 없는 오후 시간대(2:00~4:00)에는 공직자,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중계실, 명사 초대석 등과 K-TV 매거진, 영상 어제와 오늘 등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근시간 전후에는 K-TV뉴스, 정보파노라마, 오늘의 국정 등 정보 및 정책 프로그램을 본방위주로 방영키로 했다.

■신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 간	형 식	기획의도 및 내용
K-TV 매거진	50분	종합구성	생활상, 볼거리 등으로 구성
명사초대석	40분	강좌	각계 명사를 초청, 사회전반과 전문분야 등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프로그램
지구촌 이모저모	20분	종합구성	각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영상물
CH14 캠페인	10분	종합구성	영상제작소에서 제작한 극장 홍보영화 및 각 기관 제작 프로를 방영
국방뉴스	10분	뉴스	국방부가 제작한 군 관련 뉴스
공익캠페인	1분	캠페인	애국심, 안전문화, 자연환경 보존, 예절분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캠페인
우리말 바로쓰기	3분	강좌	서울대 박갑수 교수 강좌

정부간행물

외국 여론조사기관의 행동규약 번역

『세계 여론조사 법령 및 규약자료집』

공보처가 여론조사 관련, 미국·영국 등 외국 전문협회의 규약과 법령을 번역해 수록했다. 여론조사의 오류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선진국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준수하는 제반 원칙과 일반적 기준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피조사자의 익명성 보호 ▲조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자세 ▲조사보고서 제출시 명시해야 할 기본적 사항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배포 절차(프랑스) ▲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간의 상호책임 등이 이 책의 주요내용. 이 자료집은 앞으로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준거틀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보처** 刊·4·6배판·121쪽·문의 720-3049·비매품〉

각 지역의 숨겨진 역사·문화 기록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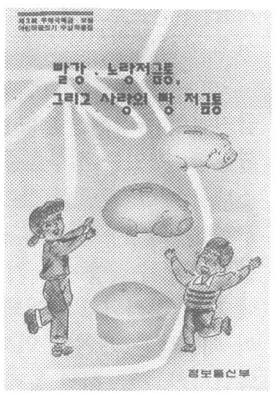
『鄕土史와 地域文化』

각 시·군 문화원의 문화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토문화에 밀착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각 향토사회 현장을 직접 방문한 교수들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기록한 경험을 담고 있다. 향토사에 대한 정의를 필두로 현재 각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숨겨진 문화재 발견 보고문제,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향토자료관의 방향 등 지역문화에 대한 모든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일본·독일 등을 방문한 학자들로부터 외국의 향토문화 실상과 현지에서의 체험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刊·4·6배판·137쪽·문의 736-2462·비매품〉

우체국 저축 소재 어린이글짓기 수상작

『빨강·노랑저금통, 그리고 사랑의 빵 저금통』



정보통신부가 3년째 주최한 우체국예금·보험 어린이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모아놓았다. 대상을 차지한 서울신학국민학교 4학년 박정우군이 쓴 '자전거야, 정우 곁으로'부터 장려상을 탄 '피노키오의 웃음' '불에도 타지 않는 저금통' 등 35개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정보통신부** 刊·신국판·135쪽·문의 750-2517·비매품〉

美·日 등 7개국 21개 법령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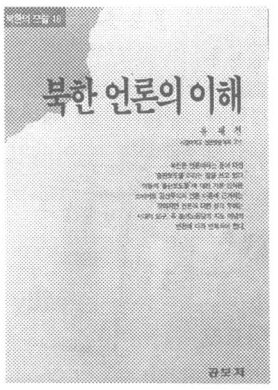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情報化關係法』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화관계법 중에서 전기통신법이나 유선방송 및 컴퓨터관련 법령 등 정보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관련된 외국입법례를 조사·연구하여 수록했다. 미국의 전자식자금이전법, 영국의 1985년 데이터보호심판소 규칙, 독일의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 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대만의 전기통신법, 일본의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싱가포르의 통신공사법 등 21개 법령을 소개해놓았다.

〈**법제처** 刊·크라운판·439쪽·문의 724-2441·비매품〉

신문·방송·통신 등의 성격 및 기능 분석

『북한 언론의 이해』



'북한의 오늘' 시리즈 10권째호.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재천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신문·방송·통신 등 북한 언론의 성격과 기능 및 언론의 기본사명과 뉴스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언론이 金부자의 고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따름으로 이들 언론이 재구성하는 내용은 곧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1994년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로동신문』 한국의 『한국일보』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의 논조를 비교 분석해 북한 언론의 이해를 도왔다.

〈**공보처** 刊·신국판·154쪽·문의 391-1030·비매품〉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서울**(02) 교보문고 3973-628, 종로서적 732-2331, 대한통계협회 725-4344, 한국경제서적센터 737-7498, 을지서적 757-8991,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 734-6818, 태평서적 777-7551, 도서출판 진한도서 319-3535, 동화서적 555-7312, 서울문고 553-3038, 매거진월드 785-6136, 한국통계서적센터 712-9301, 세종서적 776-4001, 한국잡지종합전시관 735-9464, 꿈나무 812-0348, 조우회 정부간행물판매센터 536-6377 / **부산**(051) 영광도서 816-9500, 부산도서 517-1011, 문창서적 241-2411 / **대구**(053) 학원서림 425-0050 / **인천**(032) 대한서림 762-7337, 시민서림 864-5577, 부평문고 529-0077, 한겨레문고 515-2600 / **광주**(062) 일신문고 228-2727 / **대전**(042) 경제자료안내실 580-4414, 대훈문고 254-7007, 문경서적 253-8131, 대전서적 253-5019 / **경기** 경제자료안내실 (02)502-2312 교학사 (0331)255-5706, 동아서적 (0331)255-6436, 경기서적 (0331)255-7500 경인문고 (032)654-1677, 회문서적 (0344)966-1102, 원당서점 (0344)966-4545 / **강원** 교학사 (0361)54-4133, 투비서점 (0371)43-0345, 강릉서점 (0391)648-3178 / **충북** 청주서점 (0431)221-5724, 문학사 (0441)847-2819 / **충남** 양지문고 (0417)556-6001, 문광사 (0416)55-2605, 종로서적 (0452)935-1313 / **전북** 홍지서림 (0652)88-5311, 대한서림 (0653)52-7700, 원서점 (0653)54-2785, 동지사서점 (0653)855-2717, 중앙서점 (0681)535-2784, 진서점 (0671)625-4988, 동화서점 (0673)42-5149 / **전남** 한림서림 (0631)44-5703, 일광서점 (0661)52-4414 / **경북** 학원사(0562)47-3585, 학원서점(0546)456-6222, 스쿨서점 (0571)57-9110 / **경남** 학문당 (0551)46-2925, 학원사 (0551)46-4510, 고려서적 (0591)42-4601, 진주문고 (0591)43-8321, 대일서점 (0591)759-9595, 상록서점 (0591)53-5954, 서점글밭 (0558)656-3212, 큰바위서점 (0597)62-3594 / **제주**(064) 학생서림 57-0727

※ 일부 비매품 정부간행물은 위 판매센터에서 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